

전남도 '섬 문화 엑스포' 공인엑스포 추진

내년부터 섬 3곳 선정 3000억원 투입 특구개발 신안 도초 해양복합레저단지·목포 크루즈부두 건설도

전남도가 '섬 문화 엑스포'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승인 후 공인엑스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부터 섬 3곳을 선정한 뒤 3000억원을 투입해 '섬 특구 개발사업'에 나서는 등 전남의 대표자원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동력인 섬에 대해 공공-민간 대규모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개발이 가능한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독특한 콘텐츠 발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방문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3월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가고싶은 섬 사업에 이어 민선 7기에서는 국립 섬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유치, 섬 특구 개발사업, 섬 문화 엑스포, 신안 도초 해양복합레저단지, 목포 신항 크루즈부두 건설 등 섬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비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섬 문화 엑스포의 경우 여수시가 2026년 비공인 엑스포인 '여수 국제 섬박람회'를 치르고 난 뒤 2030년 이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삼았다.

섬 1곳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섬 특구개발 사업(2020~2025)'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50%에 민간자본 50%를 더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섬 3곳을 선정해 경관 개선, 복합문화공간, 여촌테마거리, 부띠끄호텔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섬 3곳은 사실상 전남의 관광거점이 될 전망이다. 개별사업으로는 1500억원이 투입되는 신안 도초 해양복합레저단지(2020~2030), 1007억원의 목포 신항 크루즈부두 건설(2020~2025) 등도 예정돼 있다.

전남도는 각종 행위 규제 및 시설물 설치 제한 등으로 민간자본 투자 유치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섬 개발 특별법 제정, 건축법 개정, 섬 경관조례 제정 등 관련 법규제·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내 섬 상당수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5개 사·군 2321km²), 수산자원 보호구역(11개 사·군 1509km²)에 포함돼 있어 신규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것은 물론 주민 생활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연륙연도교 사업, '1000원 여객선' 정부 정책 반영 추진,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여객선 이용요금 할인 확대, 여객선 이용 섬 여행자 운임 지원 건의 등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도서 종합 개발 사업, 테마 섬 개발사업, 다도해 명소화 사업 등 기존 섬 관련 사업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설 투자 위주의 개발 사업인데다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섬 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민선 7기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사업, 섬 관광개발사업, 여촌뉴딜 300 등 현재 진행중인 섬 관련 사업·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신규 사업과 함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상심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의 날 지정 등으로 섬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되돌아보고, 미래 핵심자원인 섬의 보존과 개발의 틀을 마련하겠다"며 "신규 사업은 보존해야 할 대상과 개발이 불가피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공동주최하는 섬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8월 7일부터 3박 4일간 목포 삼학도 일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전남도에는 유인도 277개 등 모두 2165개의 섬이 있으며, 전국 3348개(유인도 472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의병 추모시설 관리 미흡...사실상 방치 장성 대형 땅꺼짐 원인 규명 부실 의혹"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 330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방치되다시피한 호남의병 추모시설과 장성지역 대형 땅꺼짐 현상에 대한 용역조사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호남의병 추모시설 관리 미흡"-문행주(화순1·민주) 전남도의원은 이날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지역 의병 추모 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얼마나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남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1911명(임진왜란 904명·한말 1007명), 전북 1236명, 광주 159명 등 호남의병은 3306명으로 관련 추모시설도 21개 사·군에 187개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문중이나 개인이 세워 관리하는 사당·기념관·동상·영정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상 시설은 전무하고 의병 활약상 등 사료 조사 연구도 미흡하다는 게 문 의원 주장이다.

전남도 차원의 호남의병 추모사업도 없다. 최근에는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나섰다. "호남의병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모기념관과 체험관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싱크홀 조사, 제대로 되겠나"-유성수(장성1·민주) 전남도의원은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대형 땅꺼짐(싱크홀)'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성에서는 최근 와룡리 일대 농경지 '땅꺼짐' 현상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는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 서 지난 2008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땅꺼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땅산 굴착에 의한 인재냐', '지하수에 의한 자연현상이냐'를 놓고 주민들과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

문 의원은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 조사를 맡은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가 발사를 의뢰한 업체의 학술용역을 수차례 독점해 수수한 특수관계에 있다"며 "향후 나올 용역 결과를 어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대표측과 고려시멘트측이 협의해 지질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했다"면서 "싱크홀 발생원인 규명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정훈 전 국회의원의

균형발전위 특별위원회 위촉

신정훈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 및 공약 특별위원회장에 위촉됐다.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공약과 지역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서 직접 관리·점검해 나간다.

신 위원장은 "광주 전남 현안사업인 한전공대 설립과 화순 생물의약산업 벨트 및 영산강 고대 문화권 사업 등 전남권 공약도 심도 있는 논의와 추진 방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역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는 한편 생활 SOC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 개보수 작업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작업자들이 화상 상봉장에 설치된 희망 메시지 게시판과 집기들을 철거하고 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13곳 개·보수

이달말 마무리...2주간 시범운영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준비를 위해 3일 국내 화상상봉장 13곳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1층에 위치한 '묘향 산마루실'과 '칠보

산마루실'에 대해 먼저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한적 분사 내 나머지 3곳과 지사 8곳에 대해서도 새로 꾸미는 작업이 진행된다.

화상상봉장은 2007년 7차 화상상봉 이후 장기간 방치돼 현재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재는 대한적십자

사 남북교류팀장은 "지금은 통신과 연결 방식이 바뀌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며 "(장비) 10여년 지나 지금은 (작동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SD급' 저화질이었던 모니터 등은 물론 통신설비까지 전면적으로 교체된다. 정부는 이달 말 개·보수 작업이 끝나면 2주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보수는 설비 교체뿐 아니라 고품질 이산가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크다.

제주와 춘천, 광주, 대구의 화상상봉장은 승강기도 없는 건물의 2층 또는 지하에 위치해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1층으로 위치를 옮기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7년 7차 화상상봉 이후 장기간 방치돼 노후화된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고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약 31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의결했다. 정부는 대북 장비 지원을 위해 북측과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서 세계인권도시포럼 9월 열린다

30일~10월3일 DJ센터서

인권 도시 광주에서 2019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린다.

3일 광주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 인권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를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기획위원회 열어 올해 포럼 개최 시기, 주제, 프로그램 구성 등을 확정했다.

올해 주제는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도전과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의미에서 결정됐다.

이번 포럼은 공식행사, 전체 회의, 주제회의, 네트워크회의, 특별회의,

인권교육회의,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 8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개 국제 인권기구·단체가 제안한 위원회 연례회의, 주거권 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교육프로그램, 도시권 회의, 도시권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내외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회의, 국내외 읍부즈맨 회의, 국제인권교육 증진방안 워크숍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 밖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공무원 워크숍, 해외 인권정책 워크숍, 인권 논문 발표, 인권토론 그룹, 인권문화 탐방, 전자체험 프로그램 등이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